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복거일
소설가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의 지도자들이 함께 감옥에 갇힌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심 공판에서 24년 징역과 180억 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 나라 는 더 깊이 분열되고 침체될 것이다.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단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야당 대변인의 논평이 설득적이다.

두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보수 세력 전체를 몰락으로 이끌었다. 이제 대한민국을 높이고 지키는 보수 세력은 힘을 잃었다.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되었나?' 하는 물음이 도처에서 들린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은 중요하다. 그

이념적 무지가 부른 재앙

괴로운 일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보수 세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두 지도자의 몰락엔 물론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다. 그러나 우파 정권이 좌파 정권으로 바뀐 것이 몰락의 계기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역시 근본적 요인은 이념적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 이념적 분열이 깊은 데다 북한의 이념적 공세에 오랫동안 노출된 우리 사회에선, 이념의 영향이 유난히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두 지도자들은 이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런 이념적 무지가 끝내 화를 불렀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념을 넘어서 실용으로'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념을 철 지난 것으로, 하릴없는 지식인들이 들먹이는 것으로, 마음만 먹으면 가볍게 버릴 수 있는 것으로, 어긴 것이다. 기업인으로 성공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기회를 준 자유 시장에 대한 고마움도, 재산권의 소중함도, 시장과 재산권을 거센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려 애써 온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존재도 몰랐다는 얘기가. 평생 '이념적 무임승차자'로 살아왔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서 '경제 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제 민

중화는 원래 19세기 후반에 영국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목표인 '부의 평등'을 가리킨 말이었다. 긴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 그 개념은 시장 경제에 적대적인 특질들을 많이 지녔다. 그것이 슬그머니 우리 헌법에 들어가면서, 갖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것은 자유주의 정당의 후보로선 도저히 내걸 수 없는 공약이었다. 선거에 이기려는 전략이었다는 변명이 나왔지만, 박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그 공약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이념적으로 흔들릴 때 나라를 이끌었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 약화되었다.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이념과 역사를 폄하하는 교과서들을 좌파 교사들로부터 배운 것이 특히 큰 문제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굵직한 국가 사업들을 챙기는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로 인식했다. 위험하게 기울어진 이념적 지형을 바로잡을 기회는 그렇게 지나갔다.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 정책으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정권이 동력을 잃은 뒤에야 이념적 위험을 인식했다. 그러나 '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역사 교과서 파동'

에서 보듯, 너무 서툴러서 일을 그르쳤다.

이념이 무지했으므로, 두 지도자들은 이념적 적대 세력의 위협에 둔감했다. 결코 타협하지 않을 적군이 성을 에워싸기 시작해도, 궁정에서 권력을 놓고 처절하게 다투었다.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보인 '아름다운 승복'을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공천에서 '진박계 학살'로 갚았다. 박 대통령도 보복에 나섰고 결국 함께 몰락했다. 박 대통령의 몰락에 대해 이 대통령이 보인 반응은 자신에게 곧 닥칠 위협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음을 알게 해 준다.

이 대통령이 '이념을 넘어서 실용으로'라는 구호를 내건 순간, 보수 세력의 몰락은 시작됐다. 이제 보수 세력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념에 대한 충성심이 깊은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는가? 우리가 뽑을 지도자가 이념에 소홀할 때 바로 잡을 수 있는가?' 그런 성찰이 나온 뒤에야, 보수 세력이 활기를 되찾을 바탕이 마련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칼럼



장현균
광주 서정교회 담임목사

필자는 2014년 10월 13일 광주교도소에 복역중인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15명에게 수기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두 명이 왔습니다.

수취인 거절로 반송된 편지는 선장, 기관장, 조타수, 기관원, 항해사 등 다섯 명입니다. 이미 출소한 선원들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퇴선 명령이나 방송을 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잠사 현장에서 도망쳐버린 선장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전원 합의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서 현재 복역 중입니다.

필자는 당시 수취인 거절로 반송된 편지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준석 선장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가을 하늘은 눈부시도록 맑으며 깨끗합니다. 저는 재판 때마다 법정에서 유가족과 함께하면서 피고인 가족과도 대화를 하는 장면권 목사입니다. 법정에서 선장님과 선원들 그리고 피고인 가족 특히 유가족 언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슬프고 숨이 막혀옵니다. 2014년 4월 16일 밤날, 피지도 못한 꽃들이 어떻게 저버렸는지 맹골수도에 잠든 하얀꽃들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304명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영문도 모른 채 배에 갇혀 갇고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구조의 손길조차 받지 못한 채 차디찬 바닷물이 목숨을 흘러 보냈습니다.

선장님! 낮은 임금과 언제 해고 될지 모르는 고용 불안으로 시달리는 선원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배에서 마지막까지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길 없는 아픔과 미안합니다.

아직도 10명은 가족품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맹골항에 실종자 가족들도 있습

다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니다. 유가족 언니, 아빠들은 노숙자처럼 광화문, 국회의사당, 청운동에서 찬 이슬을 맞고 지내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하여 똬뚱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광주법정에 오시는 유가족입니다. 선장님 가족도 얼마나 애타는 심정과 부끄러움으로 힘들겠습니까? 이제 선장님께서 최후 진술하실 때 진실함이 침몰하지 않도록 정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양심고백을 하는 것만이 유가족 뿐 아니라 선장님과 가족에게도甦뫵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선장님입니다.

세월호 배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를 못했는지, 왜 선장님과 선원들만 탈출했는지 정직하고 솔직하게 알려주시시오. 그것만이 선장님과 선원이 사는 길입니다. 진실과 양심이 사는 길입니다.

법정에서 단원고 생존 학생은 마지막 진술을 할 때 “선원들에 대한 처벌보다 더 원하는 것은 왜 친구들이 그렇게 돼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장님 재발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언니, 아빠 가족들의 마음을 아시고 양심 선언을 해주십시오. 그때 국민은 선장님

을 용서하며 응원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위대합니다. 권력은 끝나지만 국민의 힘은 영원합니다.

선장님의 참회와 자복으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진실이 꽃 피고 하늘에서 눈길지 못하고 있는 생명들이 편안히 안식하도록 도와주시시오. 물론 선장님의 양심 고백은 선장님 스스로를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성경에 참말을 하지 않을 때 “나에게는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욥3 : 26)고 했습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니라”(마10 : 26-27) 말씀하십시오. 선장님 부디 양심고백을 해주세요. 양심 선언입니다. 건강을 기도합니다.”

수취인 거절로 반송된 편지를 이렇게 다시 보냅니다. 옥중에 계신 선장님과 선원들의 양심 고백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장현균 목사 올림.

기고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3월 20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이 강하면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전국이 '물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비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야 마련된 셈이다. 이 법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최근 성과를 내기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 발전 정책의 법적 기반으로 작동했다. 그 후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약화되었던 이 법의 주요 부분이 이번 법 개정으로 상당 부분 복원되기에 이른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하여 '참여정부 이후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국가 균형 발전 추진 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국가 균형 발전 긴급한 국가적 과제다

자평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과거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되었던 명칭을 벗어던지고 제 이름을 되찾았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약한 위원회에서 강력한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법에 따르면, 앞으로 한해 10조 원 규모의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 부처는 균형위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 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예산 당국은 균형위의 의견을 감안하여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배분·조정·편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 혁신 클러스터의 지정, 포괄 지원 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 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균형위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균형위 구성도 각 부처 장관들과 민간 위원들에 더하여 지역 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 의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의장이 지방정부 대표로서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둘째,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고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시·군·구별로 지역 혁신 체계 계를 가동한다. 지방 정부,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 기술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그것이다. 협의회는 시·도와 시·군·구 발전 계획과 지역 혁신 체계 평가·개선 방향 등을 심의하며, 지역 혁신이 국가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균형 발전 지평의 도입, 지역 기업의 육성, 지역 고유 문화 발굴 등 다양한 균형 발전 시책을 추진한다.

셋째, 지역의 새로운 혁신 성장 거점으로 국가 혁신 클러스터(국가 혁신 융복합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 혁신 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 등 지역의 주요 발전 거점과 주변 산업단지·대학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균형위에서 의결하여 지정한다. 국가 혁신 클러스터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그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며 보조금과 세제, 금융, 규제 특례, 혁신 프로젝트 등 5대 지원 패키지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넷째, 시·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부처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 계약 제도를 추진하게 된다. 이 제도는 프랑스나 영국 등 유럽 나라들에서 사용된다.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 부처와 협약을

맺으면, 부처가 협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10월에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균형위는 국가 혁신 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가 혁신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수립 지침 마련, 중핵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유치 지원단 출범식 등 제반 준비 작업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시공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이다. 인구 비중, 권력 집중, 경제력 집중도, 그 무엇으로 봐도 수도권은 이상비대로 몰살을 앓고, 지역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는 계층 간에서도 심각하지만, 그것이 지역간 불균형과 중첩되면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라는 끔찍한 국가 미래 전망과 젊은이들의 희망을 억압하는 청년 실업도 국가 불균형의 귀결점이다. 국가 불균형은 결국 나라를 건강하지 못한 장애 국가로,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로 이끄는 악의 요소다. 새 출범한 균형위가 민족 생존의 필수적 조건인 균형 국가 건설을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작동하길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광주시장 후보들 문화계 목소리 귀 기울여라

광주 지역 30여개 문화예술단체들이 6·13지방선거를 앞둔 광주시장 후보들에게 민선 7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화예술계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참여 단체들이 지역 문화계를 대표할 문화 10대 과제 또한 문화 예술인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 발굴한 것이라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많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걸맞게 문화 부시장제를 도입해 달라는 것이다. 문화 부시장제 도입을 통해 광주의 문화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정치·사회적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광주시에는 행정과 경제 부시장만 있고 문화 정책은 분청 내 문화관광체육실과 출연기관인 광주문화재단이 나눠 맡고 있다. 문화 부시장제가 도입되면 컨트롤 타워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등에서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

문화 협치 조례 제정도 획기적인 제

안이다.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문화 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상설적인 협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공직에 문화 예술인을 개방형으로 채용하고 공무원들이 순환 근무로 맡고 있는 광주문화예술화관과 관장 자리 등을 공모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는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달라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어쨌든 광주 시장 후보들은 문화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행히 민주당 경선에 나선 유력 후보들이 문화 부시장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민선 7기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제안들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광주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다만 표를 의식해 이들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민간공원 녹지 90%’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광주시가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진행 시 녹지·공원 면적을 90% 이상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 시도가 현재 추진하는 사업 대다수의 경우 녹지·공원 면적을 70~80% 정도 차지하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비해 보

는 대담히 환영할 만한 수준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시는 기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는 진일보한 형태로 가닥을 잡았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지인 송정·일곡·중앙·운암산·신용 등 6개 공원 전체면적 751만 7000㎡ 가운데 90% 수준인 702만 7000㎡를 녹지·공원 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는 2020년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4월 말 사업공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간커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은 재정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며, 공공성 강화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개발사업을 맡는 게 합당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어느 시장이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아니라 후순에 물러줄 공원을 얼마만큼 보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녹지·공원 면적의 확보도 좋지만 고층 아파트 건립만은 막는 것이 중요하다. 방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개발 지역을 기존 상업지구나 아파트와 연계해 지가 상승 등 개발 이익에 중점을 두는 사업안에는 감점을 주는 방식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無 等 鼓

서독에 살던 작곡가 윤이상(1917~1995) 선생은 어느 날 TV에서 눈을 땡 수가 없었다. 계엄군에 의해 수많은 광주 시민이 학살되는 장면이 방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이었다. 계엄군의 만행에 치를 떨던 그에게 때마침 서독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대

이념 논란에 휘말리는 바람에 생전에는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 지난 3월 베를린에서 유해로 돌아온 윤 선생은 49년 만에 고향 통영에 안장됐다. 그의 '귀향'을 주제로 열린 통영국제음악제에서는 '광주여 영원히'가 개막작으로 연주됐다.

‘광주여 영원히’

그렇게 해서 탄생한 '광주여 영원히'(원제: Exemplum in memoriam Kwangju)는 1981년에 초연됐다. 원제목에 등장하는 '엑셈플럼'(Exemplum)은 '모범' '본보기'를 뜻하는 라틴어다. 광주

다만 '환희 : 22일-26일'을 주제로 한 바로 이 공간에 들르면 된다. 1980년 5월21일 공수부대가 도심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이른바 '해방광주'를 형성화한 이 공간에서 듣는 그의 음악은 다시 한 번 웃음을 머금게 한다.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논란으로 닫혀 있던 민평이 5·18 38주년을 맞아 한시개방(5월15일~6월17일)된다. 올해 5월에는 민평에 둘러 광주를 사랑했던 한 예술가를 떠올리며 광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윤영기 사회부장 panfoot@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경제부 220-0663 FAX 222-8005
편집부 220-0649 FAX 222-0661	문화체육부 220-0664 FAX 227-9500
정지부 220-0632 FAX 227-9500	인사부 220-0536 FAX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FAX 220-0697	체육부 220-0697 FAX 220-0693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